

광주 동부서 청사 이전, 토지 주인 반발 '논란'

이전 부지 80% 소유자와 보상금액 협의 중 강제수용 절차 “개인 소유 필요토지만 수용 뒤 맹지 만들어...재산 침해”

광주 동부경찰서 청사 이전을 놓고 해당 토지 주인 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의 주인과 토지 보상금액 협상 하자면서 2년여 정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강제수용 절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1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구 용산동 산 11번지 일원에 동부경찰서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동부서는 1982년 개서한 뒤 건물 노후화와 주차공간 협소, 외벽 균열·누수 등 문제를 안고 있다.

2008년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됐고, 2017년에 사업비 373억원이 편성되면서 이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주인이 청사 이전과 관련해 부지 지정 수년 전부터 땅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온 개인의 토지를 공공기관이 강제로 수용해 빼앗으려고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사가 이전예정지 80%를 소유한 A씨는 “경찰이 2년여 동안 보상금액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해서 4~5차례 만났다”며 “가격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 갑자기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말 광주 동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통과되면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A씨 측은 “은갖 이야기로 안심시켜놓고, 뒤로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힘없는 시민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다”고 말했다.

A씨는 동부서 청사 이전 부지 인근에 1

만40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3300평이 동부서 청사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1만700평으로 들어갈 수 있는 8m 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경찰은 설계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개인 소유지에 멋대로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토지만 수용한 뒤 나머지는 맹지로 만드는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인지 궁금하다”며 “협의는 도대체 왜 하자고 했고, 차선책으로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묵살하

면서 개인 재산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 동부경찰서 측은 “현재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 행정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A씨에게 10번가량 만나 공익사업 설명을 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개인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아직 동부서에서 자료가 오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서류가 오면 도시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 법조인들의 선서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연수생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임금협상 결렬’ 기아차 노조 17일까지 부분파업 돌입

2019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13일부터 17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 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13~15일 주간조와 야간조의 근무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고 16~17일에는 6시간씩 줄이는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노사는 지난 10일 19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은 결렬됐으며 노조는 곧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기본급 4만원(호봉 승급 포함) 인상 △성과 및 격려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임금협상을 합의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교섭을 재개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전국 PC방 3000여곳 PC 21만대 잠비로 둔갑

관리프로그램에 악성기능 심어 납품...4억 챙긴 일당 구속

PC방 게임관리프로그램에 몰래 악성기능을 심어 전국 PC방에 납품해 유령 포털 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PC방 이용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돌려 수익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PC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38)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프로그램 개발자 C씨(37)와 영업담당자 D씨(27)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와 프로그래머 C씨는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게임관리프로그램을 납

품하면서 어떠한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는 악성기능을 몰래 숨겨 넣어 유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잠비PC’ 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인 B씨를 통해 또 다른 PC방 관리프로그램 제공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악성기능이 숨겨진 파일을 제공하는 등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피사방 3000여곳에 악성기능이 숨겨진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들은 영업을 통해 의뢰받은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 조작업체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년간 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본격적인 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한 다음, 무작위로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 전화하여 연관검색어 조작을 통한 홍보를 권유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A씨들의 범행으로 1년간 전국 3000여곳의 PC방 21만대의 PC가 잠비 PC화됐고, 이를 통해 1억6000만건의 포털사이트 검색을 실행해 9만4000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악성프로그램은 PC에서 어떠한 작업이라도 몰래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전국 PC방의 21만여대 PC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이를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연관검색어 조작은 물론, 개인정보 탈취 및 불법활용 사범에 대해서도 지속 단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편 살해 혐의 60대 아내, 계획 범행 정황 속속 드러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아내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당초 주장한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내 A씨(61)의 진술과 달리 증거 인멸을 도운 내연남의 존재와 함께 남편 사체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범행 5일 전에 처방받은 점 △범행 직전 딸을 인근 노래방에 가 있도록 한 점 △거실에서 남편을 살해한 후 남편 시신을 욕실 앞으로 이동시킨 점 △범행 장소의 혈흔을 닦고 이불을 덮어놓은 점 △범행 직후 내연남에게 증거인멸을 교묘한 점 등이 계획범죄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아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9시20분 사이 광주 서구 자택에서 남편 B씨(55)와 다름을 벌이던 중 남편을 살해했다.

A씨는 거실에 잠든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후 노끈으로 질식사시켜 살해했다. 이후 욕실 앞으로 남편 시신을 옮겨 거실에 남은 혈흔을 닦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사건 현장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직후 내연남 C씨(61)에게 연락, 범행에 사용한 노끈과 혈흔을 닦은 수건 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탁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내연남 C씨가 범행 추정 시간 이후 현장에 약 4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보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거인멸 혐의만을 적용해 지난 9일 C씨의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 초기에도 176cm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방아흔도 없이 160cm의 여성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해 사망한 점 등을 볼 때 악랄 사용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집을 나서 노래방에 다녀온 후 다음날 오전 1시쯤 딸과 함께 귀가해 “외출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숨져있었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 몸에서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되자 A씨는 남편과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이후 조사에서 부분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건 결과 숨진 B씨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먹기 위해 처방받았고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 061)333-6832 FAX : 061)334-7701